

1995년에는 많은 사회공간적 사건과 변화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것은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시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제의 본격화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제도적·실질적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그 동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었던 권한들이 지방정부에 어느 정도 이양 또는 위임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계획이 입안·시행될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제의 시행은 지역주민들의 민주적 의사수렴과 자율적 참여에 기초하여 지역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는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이같은 장밋빛 미래만을 약속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인다. 지방자치제의 기본적 원리와는 달리,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긍정적 측면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부정적 측면들이 우려되기도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회적 부의 재분배와 사회적·지역적 갈등을 중재해야 할 중앙정부는 사실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안들까지도 지방정부에 떠넘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는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복지보다는 지역경제를 위한 개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아도,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시장개방을 통해 해외 자본과 상품이 지역 구석구석까지 밀려들어오고, 지방정부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또는 지역간 경쟁을 명분으로 지역내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는 토지개발과 사회간접시설의 조성 등에 민영화 또는 민간합동방식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통제를 시장 메커니즘에 더 많이 의존하려 한다.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의존성 증대는 지방정부가 마치 기업가처럼 지역을 경영하도록 하고, 이를 구성하는 정치가나 관료 및 계획가들이 마치 세일즈맨인 것처럼 활동하도록 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미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새로운 기구편성(예: 지역경제기획단의 구성) 등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전략이나 계획에서의 담론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경제의 성장, 민영화에 의한 지역개발의 촉진, 상품화를 위한 지역자원의 동원 등으로 점점 편향되고, 반면 지역사회 복지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에 대한 관심은 표면적으로 강조되고 있기는 하나 실제 지방정부의 계획과 정책에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은 채, 기존의 또는 새롭게 나타나는 빈곤의 양상들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지역사회 구성원들 가운데 지방정부의 이러한 역할이 합리적이거나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고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정부의 정책과 지역주민들의 인식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물론 지방자치제가 시행되고 있는 현실의 전반적인 경제정치적 구조 속에서 규정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현실,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과 계획에 대한 이론적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경제성장을 위한 개발 및 지역주민생활을 위한 복지, 양자 모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지방정부의 공간환경계획에 대한 적절한 이론적 고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관련된 경제·정치적 변화 전반을 재조명하면서,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성격지어진 지방정부의 역할에 내재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아가 지역의 주거, 교통, 환경 등에 대한 계획 대안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실적·이론적 상황 속에서, 이번 6호는 자치시대의 공간환경을 전체 주제로 설정했다. 우선 <권두논단>에서 자치시대의 공간환경을 전망하고 있는 형기주 교수는 지방자치제 시행의 의의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자치시대 경제발전에 기초가 되는 새로운 축적체제의 등장과 지역여건의 변화를 고찰하면서, 지역환경정책과 산업입지정책의 대안적 방향을 모색

하고자 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의 새로운 공간환경계획의 과제를 다루고 있는 양운재 교수는 우리 나라 공간환경의 전반적인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지방자치제의 본격적 시행에 따른 공간환경정책의 변화 및 이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공간환경계획의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특별기획>에서는 자치시대 공간환경계획의 이론과 실재를 심도 있게 다루고자 하였다. 자치시대 공간환경계획의 딜레마를 다루고 있는 최병두의 논문은 공간환경계획에 관한 기존 이론들에 있어서 문제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경제정치적 조건 및 공간환경의 변화 그리고 계획의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권력관계 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면서, 절차적·실체적 계획이론간, 시장·계획의 역할간, 모던·포스트모던 계획간, 그리고 성장연합·반성장연합간의 갈등 또는 딜레마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미래 공간환경계획의 대안적 기본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창우의 논문은 도시환경문제를 주제로 하여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실현을 위한 도시공간의 실재론적 이해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그는 기존의 연구방법론들은 모던한 도시공간을 이해하는 데는 적합할지 몰라도 환경시대에 있어서의 생태계로서 도시공간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실천하기 위해 실재론에 기초한 도시공간의 인식전환이 필요 불가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치시대의 주거환경을 다루고 있는 임서환의 논문은 주거환경과 관련된 실존주의적 담론과 그 실천적 의미를 서술한 후, 과거 중앙집권적 공업화시대 및 지방자치제의 부활에 따른 지방화시대의 주거환경과 지방정부의 역할을 각각 분석하고, 나아가 주거환경을 둘러싼 갈등의 구조와 주거운동의 과제를 조명하고자 한다. 특히 그는 이러한 연구의 목적이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가져온 새로운 정치경제상황 속에서 주거환경의 쟁취를 위한 운동의 의의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치시대의 도시교통계획을 다루고 있는 황기연의 논문은 도시교통계획에 대한 과정 중심적 논의를 통해 기존 교통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로 자율과 경쟁으로 대변되는 지방화시대의 교통계획이 지향해야 새로운 정책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는 이러한 논의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

울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론쟁점>에서 정병순과 이재원은 최근 서구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기업가적 성격, 특히 이러한 정부가 취하는 두 가지 이행방향, 즉 민영화와 민관합동 가운데 전자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들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은 민영화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사회철학적 논의, 신보수주의의 논리, 그리고 사회적 마케팅의 개념 등을 상술하고, 기업가적 정부가 동원하는 수사(修辭)와 실재를 대비하여 민영화 정책의 목표 및 효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가적 정부의 두 가지 이행방향 중의 하나인 민관합동에 관해서는 아래의 <연구논문>에서 별도로 논의하고 있다.

<현장분석>에서 이정훈은 서울시 인접지역에서 비닐하우스 형태를 빌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이용의 실태와 이것이 존재하게 된 사회·공간적 조건을 살펴보고 있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비공식적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생활공간 및 생산공간으로서 매우 불안정하며, 이는 한편으로 이 지역이 시간적 한시성을 가지는 점이지대의 성격을 가지고, 다른 한편으로 소경영방식을 통해 자신의 생활조건 개선과 사회계층적 지위상승을 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특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비공식적 토지이용과 생존전략은 도시 비공식부문이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1980년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치시대 공간환경이 어느 정도 새로운 것인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가능하도록 한다.

<정책토론>에서는, 본 호의 전반적인 주제와 직·간접적 관련을 가지는 세 가지 경험적 사례들이 고찰·논의되고 있다. 변창흠은 영종도 신공항고속도로 사업을 재검토하면서 민자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의 성격과 한계를 다루고 있다. 그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 민간자본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국가의 지원체계라는 본질적 비판 외에도 현행 민자유치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장성수는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참사, 신도시 부실공사 등에서 드러난 한국건설산업의 구조적 한계를 경영구조, 재무구조, 하청구조, 발주 및 입찰제도, 공사안전관리 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이세영은 1990년대에 지속되고 있는 도시빈곤을 최근 언론이 주목할 만큼 급증하고 있는 무주

거지(the homeless)라는 새로운 양상에 초점을 두고 논의하고 있다.

<연구논문>으로는 두 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하나는 <이론쟁점>에서 다루어진 기업가적 정부의 두 가지 이행방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민관합동에 관한 논문으로, 정병순은 민관합동이 표방하는 정책목표가 상당 부분 반사실적 논리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에서 나타난 그 실체가 무엇이며, 또한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고찰하고 있다. 노후아파트 단지의 재적용모형을 다루고 있는 또 다른 논문에서, 문홍길은 노후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개념적 틀을 구축하고, 이에 기초하여 재건축논의에 건축계획 및 단지계획적 접근을 회복시킴으로써, 현재 반도시적 획일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도시주거지의 형태 변모의 다양화를 위한 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동안 《공간과사회》를 편집해 왔던 ‘한국공간환경연구회’가 지난 11월 1일 ‘한국공간환경학회’로 확대·발전하게 됨에 따라, 학술지의 편집·출판도 ‘학회’의 이름으로 하게 되었다. 1988년 7월 창립했던 ‘연구회’는 그 이후 많은 성과물들을 누적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회원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소모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보다 공식적인 ‘학회’로 발돋움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학회로의 전환은 한국공간환경에 관한 진보적 연구의 단순한 양적 팽창이 아니라 보다 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따라 다음 호부터 《공간과사회》의 기획·편집도 새롭게 개편할 예정이며, 특히 학회의 학술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투고의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게재논문에 대한 심사관리도 보다 체계화할 계획이다.

《공간과사회》에 대한 독자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의견 및 직접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앞으로 한국공간환경학회 및 그 연구대상인 한국공간환경이 더욱 발전하기를 독자들과 함께 기원해 본다.

1995년 12월 20일

최병두